

단체장·지방의원 줄사퇴 ‘행정·의정 공백’ 우려

기초단체장들 체급 높아 광역단체장 도전
광역의원도 줄사퇴...공백 최소화 대책 필요

6·13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선출직 등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인 하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사퇴한 경우 일정기간 행정과 의정 공백은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도사퇴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민행배 전 광산구청장과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지난 7일과 15일 각각 청정직을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단체장이 사퇴한 지자체는 부단체장이 6월 선거에서 새 단체장이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아 행정을 처리한다.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이 아니어서 적

극적 행정보다는 관리형·현상유지 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비밀비재한 실정이다.

단체장으로 체급을 올려 출마하는 광역의원들의 사퇴도 줄을 잇고 있다.

광주시의회 의원 22명 가운데 이날까지 사퇴한 시의원은 모두 4명에 달한다.

임택 의원(동구1)을 비롯해 김보현(서구2)·김영남(서구3)·문상필 의원(북구3) 등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의원직을 내려놨다.

임택 의원은 동구청장, 김영남·김보현 의원은 서구청장, 문상필 의원은 북구청장에 각각 출마한다.

여기에 민주당 조오섭, 민주평화당 이은방·이정현 의원도 각각 북구청장과 광산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의

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광역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일부 광역의원들은 지난 2일 시작된 시장·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로 일찌감치 의원직을 던지고 사실상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자치단체 관할지역 전체를 선거구로 하는 단체장선거는 광역의원보다 선거구가 훨씬 넓기도 하고, 현직단체장과 경쟁하는 경우 쉽지 않은 승부가 되기 때문이다.

광역의회 역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원직 사퇴가 많은 곳은 남은 기간 ‘의정공백’이 우려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생기는 공백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출마할 경우 최소한 선거 1~2년 전에 물러나거나 국민헌세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국가에 환원하는 등 법과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함께 갑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오른쪽)이 19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마치고 노동조합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조삼수 대표회장. /김태규 기자

이동걸 “더블스타, 금타 ‘떡튀’ 못해”

“노조 해외매각 동의안하면 법정관리 불가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9일 광주를 찾았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중국 더블스타의 ‘떡튀’ 가능성도 부인했다. <관련기사 7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금호타이어 노조와 첫 면담 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국 더블스타 떡튀 의혹에 대해 “기술적, 이론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승용차 타이어 기술을 가지고 (더블스타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트럭 타이어를 생산할 수 없다”며 “더블스타가 이 공장(광주·곡성공장) 문을 닫아서 무

슨 이익을 볼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가) 한국 마켓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매력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시설(광주·곡성공장)을 뜯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금호타이어) 중국 공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업은 중국 기업밖에 없고 유럽, 미주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도 중국 공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물색과정에서 더블스타를 포함한 국내외 유수 타이어회사,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 등 다양한 잠재후보군과 접촉했으나 더블스타 만큼의 투자조건과 경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채권단 이익을 위해 무책임하게 국내 회사를 해외에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그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조치 등을 언급하며 해명했다.

이 회장은 “채권단은 워크아웃에 투입된 3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투자유치 후 필요한 자금요구를 감안해 기존 대출금을 만기연장하고 금리를 인하할 뿐만 아니라 2,000억원 신규자금을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검찰, ‘뇌물·비자금’ MB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내일 영장실질심사 전망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횡령·배임·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중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터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다스

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별활동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부 개헌안 26일 발의 20~22일 대국민 설명

문 대통령 “국회 합의면 철회...4월 임시국회 연설 검토”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6·13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합의할 경우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

할 수 있으며, 국회논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4월 임시국회에 국회에서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

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과 당대표 및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 등 국회 설득작업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4월 임시국회 연설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합의하면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회가 합의하면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평창의 겨울을 세계가 기억할 것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2018 평창 대회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어 낸 기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
추운 날씨에 묵묵히 땀 흘려 주신 자원봉사자들,
안전을 책임져 주신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대원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해 주신 후원기업 및 협력업체,
건강한 식사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쓰신 조리사와 환경미화원들,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시는 강원도민과 평창, 강릉, 정선의 군민, 시민들,
그리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